


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
 관계부처 합동	2019년 7월 30일(화) 석간 (7. 30. 10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과 장 채수경 (044-205-3341) 사무관 채영주 (044-205-3342) 사무관 전용우 (044-205-3357)
		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 과 장 박행열 (044-201-8310) 서기관 한현덕 (044-201-8312) 사무관 김종현 (044-201-8462)
		인사혁신처 복무과 과 장 안 석(044-201-8440) 서기관 송지연(044-201-8433)

적극행정,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다 !

-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·보호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담은
국가지방 적극행정 관련 규정 국무회의 통과 -

- ▶ 공무원 A는 강풍과 파도로 노상구조물이 유실되어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자 신속히 수면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. 이 과정에서 면허관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, 감사가 실시되었으나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어 면책되었다.
- ▶ 공무원 B는 40년간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. 이를 통해 63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0억원의 세외수입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결과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 하였다.

- 앞으로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전망이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중)는 국가·지방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제정과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및 「공무원 징계령」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.

□ 7.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·지방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.
 -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한다.
- 둘째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'적극행정 지원위원회'를 신설한다.
 - 지원위원회*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,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.
 - *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도 가능
- 셋째,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한다.
 -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,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·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.
- 넷째,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.
 -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.
- 다섯째,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.
 -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
 -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·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.
- 여섯째,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한다.
 -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고,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.

< 국가·지방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주요 내용 >

구 분	주요 내용
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▶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▶ 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 기관장의 적극행정 활성화 의무
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각 기관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발 ▶ 특별승진·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의무화
적극행정 공무원 면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및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요구면책 및 징계면제 ▶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
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검토 ▶ 징계의결요구 및 형사 고소·고발 시 법률전문가 지원 ▶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지원
소극행정 예방근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엄정조치 의무화 ▶ 소극행정 예방·근절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

□ 또한, 금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및 「공무원 징계령」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.

○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,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,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.

□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.”는 점을 강조하며,

○ “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참고 1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정 전후 비교

현 행	제정 이후
① 기관장 책임 강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전담부서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책임관·전담부서 지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관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
②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 담당자가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 지원기구 미비 ※ 사전컨설팅은 부서장이 신청,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등은 지원이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※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위원회 활용 가능
③ 우수공무원 선발 및 보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기별 우수공무원 자체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의무화
④ 적극행정 면책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사·징계 관련 법령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산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제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컨설팅대로 업무처리시 면책 (징계요구면책 + 징계면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컨설팅 뿐만 아니라,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징계면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징계면제 소명 서식 및 통보절차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징계면제 소명절차 명확화
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상권 행사 관련,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 고려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선제적 검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지원 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요구, 고소·고발에 따른 기소전 수사단계, 민사소송 수행시 지원 근거 마련

참고 2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 개정 내용

□ 개정 배경

-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기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□ 주요 개정내용

<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개정내용 : 개정 완료('19.6.25.) >

○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

- 적극행정 고의·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<징계규칙 제2조의2 제2항 개정>

개정 이전	개정 이후
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	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

○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규정 신설 <징계규칙 제2조의2 제3항 신설>

개정 이전	개정 이후
· 규정 없음	· 사전컨설팅을 거쳐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(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,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)

○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 <징계규칙 별표 5 개정>

개정 이전	개정 이후
·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	· 실무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 순위에서 제외

※ 고도의 정책사항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

<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개정내용 : 국무회의 의결('19.7.30.) >

○ 적극행정 소명 및 면책 심의·의결절차 개선 <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, 제6조, 서식>

개정 이전	개정 이후
· (소명) 의견서 법적 서식이 없음	· 징계 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
· (심의·의결) 심의여부는 재량	· 면제 사유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

참고 3 적극행정운영규정 제정 추진배경

-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나 **기관별로 분산**되거나 **제도화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**

- 정부는 **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** 대응하고 **더 나은 국민의 삶**의 변화를 위해 **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음**

“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장관 책임 하에 **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**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**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**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” (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, 2.12)

-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.14일 **종합계획인 ‘적극행정 추진방안’을 마련, 현재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**

- 7.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**‘적극행정 운영규정’, 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’은 기관별, 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“첫 번째 종합규정”**이자, **‘적극행정 추진방안’에서** 확정된 대표적 과제중 하나임

-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**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고, 체계적,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.**

- 정부는 금번 규정이 **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** 주력하면서 아울러 **‘적극행정 추진방안’에 담긴 세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음**